

뺏 올린 적정공사비, 활성화 동력 시급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건설공기업들이 잇따라 적정 공사비 확보 대책을 내놓았지만 건설시장에서는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각 공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추진 가능한 대책들의 효과가 미미한 데다 대부분 연말까지 이행할 계획이라 이를 반영한 건설공사발주는 내년부터 가능하기 때문이다.

13일 관련기관에 따르면 LH는 지난 5월 안전 및 품질 확보를 위한 '적정 공사비 지급방안'을 발표하고 이에 따른 세부과제를 이행하고 있다 ▶관련기사 6면

LH는 자체 기준 개정을 통해

LH·철도시설공단·도공 등 확보 대책 잇따라 내놨지만 공기업 자체 추진만으로 한계 표준시장단가 현실화 등

정부, 근본대책 마련 나서야

추진 가능한 단기과제로 △예정 가격 작성기준 변경 △자체 품셈·자재 견적단가 개선 △건설공사 제경비를 합리화 △공사원가 계상 불분명 항목 대가기준 수립 △공기연장 간접비 적정 지급 △설계변경 제도개선 등을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이 중 예정가격 작성기준 변경에 따라 현행 설계금액의 99% 수준에서 산정하는 기초금액을 설계금액의 100% 수준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기타과제로는 공동주택 발주시기 조정 및 LH사업 특성을 반영한 공사기간 산정, 소규모 공사단가 할증 적용 등도 추진키로 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LH의 '적정 공사비 지급방안'이 실현되면 낙찰률이 5%가량 상승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만 예정가격 작성기준 변경 등 세부과제들이 대부분 연말까지 완료될 계획이라 이를 반영한 공

사 발주는 내년부터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부터는 한국철도시설공단도 불공정 계약관행 근절을 위해 공정경제 활성화 추진단을 통해 49개 세부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 중 공사대가 산정 및 공사기간 현실화 과제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적정 공사비 및 계약기간 반영 △적정 공사기간 반영 △건축분야 종사업비 현실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한국도로공사도 최근 대한건설협회가 적정 공사비 확보를 위해 건의한 과제 중 △건설현장 서면경고 개선 △과도한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개선 △기술개발 투자비 배점기준 완화 △중심제 현장대리인 자격요건 완화 등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기준을 손질해 반영했다.

그러나 적정 공사비 확보를 위한 표준시장단가 현실화 및 적정 예정가격 산정,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적정 공기산정 등은 반영되지 않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기업들이 오랜 기간 건설업계를 옥죄어온 적정 공사비 확보에 나선 것은 고무적이거나 대부분의 과제들이 지엽적이고 연말까지 추진됨에 따라 체감하긴 어렵다"며 "특히 적정 공사비 확보를 위한 표준시장단가 현실화와 낙찰률 상향 등 근본적인 대책은 공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없어 그 효과도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채희찬기자 chc@



13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열린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우리측 수석대표 조명균 통일부 장관(왼쪽)과 북측 수석대표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회담을 마치고 악수하고 있다.

▶

“하반기 SOC·일자리사업 재정 신속집행”

행안부, 지방재정 집행목표 306.1조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올해 하반기 지방재정 집행목표를 연말 기준 예산 현액의 89.2%인 306조1000억원으로 설정했다. 작년 집행실적 대비 5조2000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행정안전부는 올 하반기 지방재정 집행목표를 이같이 잡고,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력과 이월·불용액 최소화 등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지방재정집행을 총력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SOC·일자리 사업 등의 집행상황을 중점 관리하고, 긴급입찰 등 각종 신속집행지침을 활용해 추진 중인 사업은 조속히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신규사업은 최대한 조기 발주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를 위해 행안부 내 지방재정집행지일단을 구성·운영해 지자체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국비 교부와 각종 행정협의 등이 조속히 이행되도록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한편, 행안부의 올해 상반기 신속집행 실적은 목표액인 101조8000억원을 2조5000억원 초과한 104조3000억원을 기록한 바 있다.

목표 달성에는 신속집행 추진지침 시행 등 제도개선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신속집행 추진지침은 △긴급입찰 △선급 집행 활성화 △계약심사 등 기간단축 △대가지급 기한단축 △SOC·일자리 사업 신속집행 강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하반기 경제전망에 따르면 성장과 고용 등의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돼 상반기와 같은 적극적인 재정집행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통해 하반기에 일자리가 늘어나고 재정집행의 효율성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성중기자 kwon88@

9월 3차 남북 정상회담… 철도·도로 복원사업 ‘탄력’

강릉~제진 구간, 예타 면제되나

〈철로 104.4km〉

오는 9월 3차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 간 끊긴 도로, 철도를 복원하는 사업들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특히 경제성에 발목이 잡혀 수년째 제지리걸음인 강릉~제진 철도 복원사업(노선도)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에 힘이 실리고 있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한건설협회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강릉~제진 철도 복원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를 건의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도 이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를 요청한 상태다.

강릉~제진 구간 104.4km는 환동해권 남북 연결선 중 유일한 미연결 구간인데 반반이 예타에서 발이 묶였다. 국토부가 2016년 3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신규 사업으로 반영했지만 경제성이 낮다는 예타 결과가 나왔다.

건협 관계자는 “이 사업은 경제성보다 향후 본격적인 남북경협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며 “남북경제 교류와 북방경제권의 협력증진이라는 취지를 살려 예타를 면제해주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법도 남북 교류협력과 관련해 예타 면제 규정을 두고 있다. 국가재정법(38조 2항 4호)은 ‘남북 교류협력에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조·조약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은 예타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돼 있다.

건협 “경험 대비해 빨리 추진해야”
문산~개성 고속도로 연내 발주 기대

복원 필요한 남북철도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도 맞물려 있다.

박용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산업정책 연구실장은 “강릉~제진 간 철도 복원사업은 한반도 신경제지도 실현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할 사업 중 하나”라며 “신북방정책이 성공하려면 한반도 중단철도와 중국(TCR), 러시아(TSR), 몽골(TMGR) 등 대륙철도와 연계해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설업계에선 3차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4·27 판문점 선언 이행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강릉~제진 철도 복원사업의 예타 면제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실제 이날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열린 남북 고위급회담에는 우리 측 대

표단에 국토부의 도로, 철도 실무진이 총 출동했다.

문산~개성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연내 사업화 가능성이 더 커졌다.

이날 백승근 국토부 도로국장을 단장으로 한 우리 측 공동조사단 28명은 개성~평양 간 경의선 도로 현대화를 위한 현지 공동조사를 위해 방북했다. 경의선 도로에 이어 고성~원산 간 동해선 도로에 대한 공동조사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개성~평양 도로와 이어지는 문산~개성 고속도로 건설사업도 탄력이 붙게 됐다.

문산~개성 고속도로는 남한의 문산(파주시 문산읍)과 북한의 개성 간 총 19km로, 이 중 남측 구간은 11.8km이며 총사업비는 5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예타 면제 가능성이 높아 총사업비 협의 등을 거쳐 연내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발주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 밖에도 건설업계는 △문산~개성 철도 연결 △제진~금강산 철도 연결 △개성~신의주(429km) 철도 개보수 △철원~군산분계선 43번 국도(2.0km) 연결 △양구~군산분계선 31번 국도(10.5km) 연결 △철원~평강 3번 국도(10.5km) 연결 △영종도~개성공단 서해남북평화도로(80.44km) 건설사업 등을 초기 남북 인프라 연결사업 후보군으로 보고 있다.

김태형기자 kth@